Institutum Lex Feminae | ILF-ROK-PB-2026-05-KR | 대한민국 | 2026 년 9 월

차단은 삭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대응의 집행 효과성 평가 프레임워크

요약

2026 년 9 월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대응 실적은 상당하다. 활성 불법사이트는 6,683 개에서 4,736 개로 감소했고, 66 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으며, 운영자 32 명이 검거되고 그중 9 명이 구속됐다. 범죄수익 27 억 원이 기소 전 몰수·추징됐고, 5,077 개 사이트에 차단 시정요구가 완료됐으며 380 개 사이트에는 CDN 접근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활동량'을 보여줄 뿐, 피해 유통망이 실제로 장기간 무력화됐는지를 완전히 보여주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전환율 공백은 호스팅 단계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5 개 호스팅 업체에 68 개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을 공식 요청했지만, 발표 시점에 실제 호스팅 중단은 1 건이었다. Institutum Lex Feminae 는 국내 접속차단과 인프라 제거를 구분하고, 조치 후 재출현을 측정하며, 사이트 무력화를 기소·판결·형량과 연결하고, 피해자의 반복지원 부담까지 측정하는 효과성 평가체계를 제안한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 년 9 월 22 일 제 3 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는 8 월 20 일 통합대책 이후의 집행 실적을 공개했다.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에 총 20 명 규모의 4 개 불법사이트 전담 특별수사팀이 신설됐고, 76 개 사이트가 수사 중이다. 개발자까지 검거한 16 개 사이트에서는 원격 압수·삭제를 통해 재유포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동시에 불법사이트 개설행위 독립범죄화, 광고수익 차단, 긴급차단 요구권, 플랫폼 신고의무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왜 단순 실적 통계로는 부족한가

국내 접속차단은 즉각적인 노출을 줄일 수 있지만 원본을 제거하지 않는다. 호스팅 중단은 인프라를 끊을 수 있지만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면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운영자 검거도 저장된 원본이 남아 있으면 유통을 끝내지 못한다. 삭제요청이 한 번 이행되어도 미러 도메인에서 동일 영상이 계속 유통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조치를 하나의 '성과'로 합산해서는 안 된다.

2025 년 피해지원 자료에서도 지속지원 피해자는 전년 대비 26.3% 증가하여 전체 피해자의 45.1%를 차지했다. 불법·유해사이트 삭제지원은 26.9% 증가했지만 삭제불응률도 28.5%로 상승했다. 효과성은 행정처리량이 아니라 재유포와 피해자 부담이 실제로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해야 한다.

권고

1. 5 단계 '디지털 성착취 유통망 무력화 지수' 공개

우선관리 대상 사이트·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단계: 국내 접속차단, 2 단계: 특정 콘텐츠·계정 삭제, 3 단계: CDN·도메인·호스팅 인프라 중단, 4 단계: 운영자·관리자 무력화 및 범죄수익 추적, 5 단계: 30·90·180 일 동안 동일 네트워크의 실질적 재출현이 없는 '지속적 무력화'. 정부는 서로 다른 조치를 합산하지 말고 각 단계 간 이동률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서 정상 운영 중인 '국내 차단 사이트'와 서버 자체가 압수·폐쇄된 사이트를 동일한 성과로 집계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2. 인프라 사업자 이행률·단계상향 스코어카드 도입

호스팅, CDN, 플랫폼 등 검증된 한국 정부 요청을 받는 사업자별로 요청 건수, 응답시간 중앙값, 삭제·서비스중단 이행률, 반복 불응, 동일 네트워크 이전 여부, 한국 기관의 후속조치를 기록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업자 단위의 집계 결과를 공개한다.

68 개 사이트 서비스 중단 요청 대비 실제 1 건 중단이라는 결과는 각주가 아니라 핵심 전환율 지표가 되어야 한다. 반복 불응이 확인되면 규제, 수사, 광고·결제 차단 또는 국제공조 등 다음 적법 단계로 자동 상향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3. 영속적 사이트·네트워크 ID 로 집행과 형사사법 결과 연결

우선대상 불법사이트 네트워크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영속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중앙디성센터, 경찰, 검찰 단계에서 동일 ID 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지원 탐지 → 삭제·차단 → 수사 → 검거 → 송치 → 기소 → 유·무죄 → 형량 → 몰수·추징 → 30·90·180 일 재출현 여부를 하나의 집행 사슬로 추적할 수 있다.

집계된 전환율을 정기 공개한다. 예컨대 현재 공개된 운영자 32 명 검거가 향후 어떤 처분·기소·판결·형량으로 이어졌는지 추적 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활동량은 측정할 수 있어도 형사책임으로의 전환은 평가할 수 없다.

4. '피해자 재유포 부담' 지표 추가

동의한 지원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 조치 이후 확인된 재유포 횟수, 동일 피해물에 필요한 반복 삭제조치 횟수, 지속적 무력화까지 걸린 기간의 중앙값을 측정한다. 개인 식별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유통환경·조치유형별 집계만 공개한다.

효과적인 제도라면 동일 성착취물 때문에 피해자가 지원체계로 반복 복귀해야 하는 횟수가 감소해야 한다. 이 지표는 집행량이 아니라 지속피해를 실제로 줄였는지를 직접 평가한다.

핵심 평가 대시보드

- 30 일·90 일·180 일 지속적 무력화율
- 호스팅·CDN·플랫폼 요청 대비 실제 조치 전환율 및 응답시간 중앙값
- 차단·호스팅 중단 후 미러·변경 도메인 재출현율
- 사이트·네트워크별 수사 → 송치 → 기소 → 유죄 → 형량 전환율
- 기소 전 보전된 범죄수익 대비 최종 몰수·추징 전환율
- 피해자 재유포 부담: 보호사건당 재출현 및 반복 삭제조치 횟수

수신 대상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법무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공동 평가대시보드의 자연스러운 총괄기구가 될 수 있다.

개입 단계

이행평가(IMPLEMENTATION EVALUATION). 정부는 8 월 통합대책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이미 첫 대규모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각 기관이 '차단', '삭제', '폐쇄', '무력화'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고착시키기 전에 공통 효과성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결론

대한민국의 최근 집행 강화는 중요하다. 다음 질문은 이 체계가 성착취 유통 역량을 실제로 파괴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내 이용자의 접근경로만 일시적으로 바꾸고 있는지다. 동일 사이트, 인프라, 운영자, 피해를 시간축에서 추적해야 한다. '차단'은 조치이고, '삭제'는 결과이며, '지속적 무력화'가 효과성의 기준이어야 한다.

공식 자료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OUT! 국민 레이더 ON」, 2026.9.16.~12.31. 국민생각함 정책 제안 수렴.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o?mid=mda700
-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성범죄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8.20.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75030
- 성평등가족부, 제 3 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추진실적, 2026.9.22.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o?mid=mda700
-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3·제 7 조의 4.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705875
- 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bbtSn=713466&mid=mda703